

충남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토론회

이상헌(한신대학교 부교수, 녹색전환연구소장)

1. 주민/시민참여의 단계 재조정

현재 각종 장기계획, 행정계획 등에 주민/시민 참여가 형식적으로나마 들어가 있기는 함.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단히 기술적이고 공리주의적 발상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내용에 주민들의 이해관계, 필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대단히 어려움. 이런 이유로 공청회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임. 주민 참여의 단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즉, 중요한 수리관련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하여 주민의 삶과 생계, 하천 주변 생태계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초기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봄. 즉, 사업의 목적, 방향, 비전, 효과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원(예컨대 시민합의회의의 방식처럼)을 받아서 주민/시민들이 사업의 실시 여부, 방향 등에 대해서 정해놓는 것이 필요함. 큰 틀에 대해서 주민/시민들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나 대안들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다시 주민/시민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건전한 방식이라고 판단됨

2. 지역수리권 혹은 지역의 물관리 역량 강화

국가주의적 수리권, 혹은 정부의 물관리 실패 등에 대한 고찰에 전적으로 동의함.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불확실성, 물부족 등과 같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실패를 빌미로 시장에 물관리 권한을 이관하는 것은 위험함. 공유자원으로서의 물의 위상, 물정의, 물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수리권, 지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물관리 체제 개편, 관련법률의 통합/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지역의 물관리 감시 능력을 포함한 물관리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함. 그리고, 물에 대한 교육(water footprint, 가상수, 지구적 물문제, 기후변화와 물 관련 등) 확대, 지역의 수자원 보존을 위한 지자체의 입법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주의적 수리권을 기초로 한 수자원공사를 (광역단위의) 각 지역의 ‘물관리공사’로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됨

3. 기타

김은경 대표의 발제 중에서 생태근본주의의 관점에서 무조건적 보존이라는 구절은 환경운동 진영을 뒤흔들려 비하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 보임. 현재 주류 언론이 사용하는 환경운동 비판 프레임이 바로 이러한 것임. 대규모 토건사업이나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들고 나오는 프레임임.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의 경우, 실제 지율스님이 단식을 했던 것은 법적인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도롱뇽이 고속전철 공사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식으로 비난하며 초점을 흐려왔음.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프레임. 환경운동에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실제로 생태근본주의는 환경운동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님